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65.42 (-21.28)	687.39 (+3.90)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461 (-0.068)	1461.00 (-6.00)



提言

대한민국 분열과 갈등 넘어, 소통과 공존의 시대로 가자

승자도 패자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을 판단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것을 증명한 것일 뿐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넘어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한 것일 뿐이다.

헌정 사상 두번째의 윤 대통령 탄핵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역사다. 2025년 4월 4일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대통령이더라도 법 앞에 평등함이 확인됐다.’

법치(法治)는 당연하고 평범하지만, 대통령의 불행한 퇴장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안타깝다. 다만, 이번 탄핵선고에 대해 반대

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인정하자.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합의와 절차에 따른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체제 부정이라는 점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극심해진 사회 분열과 양극화부터 수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의 계엄선 포부터 4월 4일의 탄핵 심판까지 123일을 거치면서 벌어진 정치 양극화를 쉽게 치유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모두의 자제와 포용, 상대방을 인정하는 배려, 함께 살아간다는 공존의 정신이 절실하다.

바람앞 등불 신세인 경제도 살려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 상황은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급기야 국내총생산(GDP)이 1%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경제가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서로의 분열은 최악으로 가는 시간만 당길 뿐이다. 지금은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떨쳐내고 모두가 공존과 공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갈등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고,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기사 2·3·4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개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中 ‘맞불관세’, EU도 보복 경고 트럼프發 무역전쟁 자충수 되나

중국,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
EU, 협상 결렬 땀 보복관세 시사
WSJ “트럼프, 中 견제의 끈 끊어
시진핑에 전략적 선물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뉴스1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양갈음’에 나서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의 추후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구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뉴욕 증시가 맥을 못추는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내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자국의 유력매체는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서방 주요국 및 우방과 꺾끄러운 관계를 초래하고 중국에는 중국만 웃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들어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추가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맞불 대응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처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는 자국산 이 중용도 물품(군수용·민간용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미국 군수기업(16곳)에는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

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내렸다.

관세 20%를 맞게 된 EU의 경우엔 일단 ‘선협상 후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 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이 우선순위로면서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의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협상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시 보복관세 등의 비례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를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우선 사태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일본 등의 대미협상 경과를 봐 가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가진, 디스플레이, 기계 부문에 이어 7일에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4일 회의에서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긴급경영자금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조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자국 언론의 진단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라는 제하의 4일치 사설에서 백악관발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미국이 세계 각국을 경제적·전략적 블록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해 온 끈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문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해야”
국민투표법개정·개헌특위 요청
4년 중임제, 여야 많은 공감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국민투표 선거연

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개헌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지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친 뒤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라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늘 걸 지킬 것”... 승복 입장 표명 없어
▲국민의힘 3선 회동... “조기 대선 승리 전제 조건 등 의견 나뉘” /사진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국방장관 대행 “북, 예상 못한 도발 가능성... 방위태세 굳건해야”

▲김부겸 “경선 논의 본격화해야... 완전국민경선이 열쇠”
▲민주 “한 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해야”... 압박 법안도 발의